

“통역 서비스 불이행은 위법”

DC 인권국, VA 한인 남성 절도혐의 구금 경찰에 제동

나홀만에 무혐의로 풀려나

워싱턴 D.C. 경찰국이 절도혐의자로 구금했던 버지니아의 한인 남성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났다.

워싱턴 D.C. 인권국은 최근 이종열(49세) 씨가 경찰국을 상대로 제기한 통역 서비스 불이행의를 자체 조사한 끝에 2004년에 제정된 ‘언어 서비스법(D.C. Language Acces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DC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던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주류 판매점 절도 용의자로 오전 3시경 자택에서 체포됐다 4일 반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씨는 북버지니아의 한 카운티 경찰에 체포될 당시 체포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다. 또 여러 차례 통역도 요구했으나 전혀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는 4일간 카운티 경찰에 의해 구금돼 있으면서 변호사 접견권과 묵비권을 포함해 용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설명 받지 못했다 한다.

이 씨는 감금 4일째 DC 경찰국으로 이송된 후 또 다시 통역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C 경찰은 수 시간 더 이 씨를 감금하고 있다 잘못된 체포임을 발견하고 이 씨를 풀어줬다.

이와 관련 이종열 씨를 변호했던 아태계 법률 서비스 센터(APALRC,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Resource Center)는 18일 아태계 권익신장기관인

‘OCA 내셔널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언어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관련해 사법 당국을 상대로 얻어낸 최초의 승리라고 밝혔다.

아태계 법률 서비스 센터는 또 DC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적일지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요한 일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 씨를 대신해 DC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던 APALRC의 나디아 파이로즈비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언어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어 사용 능력이 부

족한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씨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장기간 자유권이 박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DC의 한 권익 단체(the Equal Rights Center)가 DC 정부 기관 중 인사 관리국, 자동차 관리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언어 서비스법 시행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86.9%가 이 법률에 따른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중 기자〉



이종열(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인권위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메이시스 백화점, 버지니아등 13개 매장 X-마스 이브까지 108시간 마라톤 영업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가 연말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샐링 마라톤’에 돌입한다.

메이시스는 20일 오전 6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6시까지 108시간동안 문을 닫지 않고 연말 밤샘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이시스는 2006년 뉴욕의 퀸스 센터

다. 메이시스의 마이크 더보스 수석 부사장은 “며칠간 밤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엔 더 많은 매장에서 이 같은 연말 밤샘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연말 쇼핑객들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1면서 계속

‘바지사송’ 항소심 기각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많이 입어 두 개의 세타소를 문 닫아야 했고 현재는 북서 7가와 M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업소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정씨의 변론은 크리스 매닝 판사가 처음부터 전담해 무료로 해 왔다.

한편 손해배상법 개혁을 주장하는 법률단체들은 피어슨의 항소심 요청 기각 소식을 들은 후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ATRA(손해배상법개혁협의회)의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배상금지급을 허용하는 손해배상법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무런 피해 근거가 없어도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워싱턴·DC의 소비자 보호법은 최악의 경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